경제민생점검회의

2005년 경제운용방향

(요 약)

2004. 12. 29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여 성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중소기업청	

< 목 차 >

Ⅰ. 경제정책 운용의 틀 ····· 1

1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 2
2 선도분야의 역량 발휘 여건 확보 ····· 3
3 취업능력 배양과 근로·사업의욕 고취 ····· 3
4 재정의 사회적 지출과 경제적 지출의 재조정 ····· 5
5 개방형 통상국가 실현으로 새로운 기회창출 ····· 5
6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 ····· 6

Ⅱ. 2005년 경제운용방향 ····· 7

1. 05년 대내외 경제여건 ····· 8
2. 05년 정책여건 ····· 9
3. 05년 중점과제 ····· 10
1 재정 조기집행 ····· 10
2 종합투자계획 추진 ····· 10
3 건설경기의 위축 방지 ····· 11
4 벤처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 11
5 금융시장 안정 ····· 12
6 서민생활 안정 ····· 12

Ⅲ. 2005년 경제운용의 모습 ····· 13

< 별첨 > 주요정책과제

Ⅰ. 경제정책 운용의 틀

< 기본방향 >

◇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

○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고용구조도 급변**

○ 지금까지 **제조업**과 **농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서 그 이상 증가**

* 업종별 취업증감(91-03년, 만명) : 농업△78, 제조업△95, 서비스업 503
* 기업규모별 취업증감(97-02년, 만명) : 중소기업 212, 대기업△125

○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저생산 업종**에서 이루어져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

◇ 매년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자면 **연 40만개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폭넓은 성장이 지속**되어야 함

○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완화, 기술혁신,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적극 추진

○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큰 부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

○ 경쟁촉진과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확보

◇ 이와함께 **지역균형발전, 환경친화적 개발, 에너지·자원 제약 극복, 고령화 대책**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도 본격 추진

1 중소기업·서비스 산업 등 취약부문을 경쟁산업화해서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

① 혁신역량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

○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R&D 투자 확대

* 65년 이후 40년간 누적 대일적자(2,150억불) 대부분이 부품·소재 적자에 기인

○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술기업을 집중 지원

○ 보호위주의 양적 육성을 지양하여, 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②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

○ 제조업, 수출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 해외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인 관광·레저·교육·의료 등에서 국내 산업의 고급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분에 존재하는 과다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의 점진적 구조조정

○ 농업도 정예선도농가 20만호(쌀전업농 7만호 포함)를 중심으로 경쟁산업화하고, 고부가가치 수출농업으로 육성

③ 성장 단계에 맞추어 보건·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수요증가에 부응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조업 고용감소 추세와 자영업 고용비중의 축소에 대처

○ 여성·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

2 첨단산업·대기업 등 앞서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정부간섭 축소 등으로 투자 분위기를 개선

○ 정부지원은 10대 차세대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 우수 인력양성,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완화**등을 통한 간접적인 뒷받침에 국한

○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정착

○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인프라를 구축

3 취업능력을 배양하고 근로·사업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

①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기회의 확충

○ 교육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소득향상, 계층간 이동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

- 공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

○ **학자금 대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가계 교육비 부담도 경감

* 현행 이차보전방식을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
* 대출금액을 등록금에서 생활비까지 포함
* 대출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확대 등

○ 기존 무상 학자금(Grant) 제도를 정비하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장학사업**으로 개편

②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 가능하도록 근로의욕 고취

○ 차상위계층, 중하위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것이 급선무

○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직업훈련체제 구축**과 **일자리 제공** 등 취업지원 강화

○ 저소득이나마 근로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기초생활 보장의 혜택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현행 조세 체계틀안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방안도 검토**

③ 사회안전망의 확충

○ 경쟁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장치**가 필요

- 경기후퇴기 경제주체들이 더욱 위축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미비하기 때문

○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

○ 연기금 및 보험재정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하여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제고**

○ **공공보육·의료시스템**을 확충하여 기본적인 서비스 보장

4 향후 재정은 인력개발 및 사회적 지출소요의 확대에 부응해야 하므로 경제적 지출은 민자유치 등으로 보완

○ 재정지출 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경제개발비 비중은 높은 반면 **사회개발비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

* 한국 : 경제개발비 25%, 사회개발비 16%
* 선진국 : 경제개발비 6~9%, 사회개발비 50~60%

- 이는 민자·금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개발비를 재정에서 부담해 온 결과

○ 앞으로는 **적극적 민자유치**와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경제적 지출을 대체

* BTL 방식 민자유치, PEF, KIC,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 재정은 **사회안전망 확충, 인력개발**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

5 능동적 개방과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한 「개방형 통상국가」 실현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

○ FTA·DDA 등 05년 예정된 통상협상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산업구조 개혁과 관련산업의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활용

○ **해외 플랜트·건설·해운·IT** 및 **자원개발 협력분야**에서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

○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시화, 금융·물류중심 기반구축 등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본격화**하고, 첨단산업·고부가서비스업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

6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

① 신행정수도 후속조치 마련 등 지역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장의 저변을 확대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시책과 병행하여 **수도권규제의 합리화**를 추진

②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국내대책과 대외협상전략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

③ 에너지와 자원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 에너지원단위 : 한국(04) 0.303→(07목표) 0.277, 미국 0.246, OECD 0.180

○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실현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투자를 확대

④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경제활력을 유지

○ 고령자의 고용상 제한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노인 취업 기회**를 확대

○ Reverse Mortgage제도를 활성화하여 노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II. 2005년 경제운용방향

< 기본방향 >

◇ 05년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려움이 예상

○ **국제유가·환율** 등은 가변성이 커 **불안요인**이 잠재

○ **내수는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

○ 이에 대응할 **정책수단의 유효성이 충분치 못한 상황**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성장**」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촉진으로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

○ 투자와 고용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회복**되고 **분배구조 개선**도 가능

◇ 내수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

◇ 모든 정책수단을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그 **유효성을 평가**하고 **추진 강도와 시기를 조율**

○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과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 **미시정책**을 망라하여 **경기순환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조 개선 노력**을 가속화

○ 각종 정책 추진시에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결정

1. 05년 대내외 경제여건

□ 국제유가의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달러화 환율의 변동성 증대 등 **해외 경제여건은 가변성이 많은 상황**

□ **수출**은 규모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 교역상대국 성장세와 교역신장세는 소폭 둔화되는데 그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

○ 그러나 주력 품목인 **IT경기가 위축**되고, 04년 중 높은 수출증가에 따른 **반락효과**로 수출 증가율은 큰 폭 둔화

□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건설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

○ **민간소비**는 지난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겠지만, **회복속도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가**에 달려 있음

* 가계부채 조정 지속, 준조세 부담 등 비소비성 지출증가, 영세 자영업자 소득불안,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마이너스 자산 효과 등

○ **설비투자**는 수출둔화, IT 경기 위축 등으로 **큰 폭의 회복세를 기대하기 곤란**

○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감소세가 지속되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위축세가 본격화**될 전망

* 미분양아파트(기말기준, 만호) : (02)2.5→(03)3.8→(04.11)6.5

2. 05년 정책여건

□ **재정**은 적자국채 발행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기확장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

○ **일반회계 예산**은 국채발행 6.8조원 포함 9.5% 증가(120.1→131.5조) 하였으나 **비정상적 요인*** **제외시 5.5% 증가에 불과**

* 채무상환 증가(공적자금 상환 2.3조, 대러차관지급 0.7조)와 회계재편(지방양여금 폐지) 요인(1.6조)

○ **통합재정지출규모** 기준으로는 **6.8% 증가**(182.0→194.3조) 하여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

○ **통합재정 적자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대비 소폭확대**에 그쳐 경기조절에는 불충분

* 관리대상수지 기준(사회보장・공적자금 제외)
: 04년 △7.2조(GDP대비 △0.9%) → 05년 △8.2조(GDP대비 △1.0%)

* IMF 기준(순융자까지 제외)
: 04년 △0.5조(GDP대비 △0.1%) → 05년 △1.4조(GDP대비 △0.2%)

□ **금융부문**은 금융국제화, 시중자금의 부동화 등으로 **정책적 유효성이 저하**된 상태

○ 금융시장이 자금 중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외환시장**은 달러화 약세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로 **불확실성 상존**

⇒ 한두가지 정책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모든 정책수단이 힘을 모으고 부담을 나누어 지는 **정책조합(Policy Mix)적 접근방식**이 불가피

3. 05년 중점과제

1 재정 조기집행

○ 소비회복 지연,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반기 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

* 상반기 재정집행률 : (04) 55%(87.5조) → (05계획) 59%수준(약 100조원)

○ 특히 일자리 부족이 예상되는 **동절기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

* 일자리관련 사업집행률(계획) : (05.1/4) 60%, (05 상반기) 80%이상
* DB구축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제공

○ 아울러 **주요 공기업들의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

2 민자유치 종합투자계획의 본격 추진

○ 집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하반기에는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

○ 종합투자계획이 경기관리 뿐만 아니라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적 투자의 시발점**이 되도록 보완·발전

- 연중 신규사업의 발굴, 사업내용 다양화, 민간의 창의와 신축성 유지로 **정부계획 및 재정운용의 경직성 탈피**

- 기업신도시, 복합레저 도시 건설 등 민간주도의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

3 건설경기의 위축 방지

○ 건설부문의 **고용** 및 **경기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은 또다른 부작용 예상

* 일자리 감소,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관련서비스업 경기 위축 유발

○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 **신도시 건설, 강북재개발, 기업도시** 등 새로운 건설투자가 조기착공되도록 추진

○ 개발이익환수제 시행과 함께 **재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의 선별적 해제**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도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4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 04.7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및 04.12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착실히 추진

○ **IT·BT·NT 등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으로 우리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시키는 초석 마련

○ 공정거래에 기반한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유도**로 win-win 관계 정립

○ **자본시장 육성**으로 융자위주의 **자금공급을 투자위주로 전환**

5 금융시장 안정

○ 내년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유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해 **적극적 신용회복 지원 방안 강구**

○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구조 장기화를 유도하고 '네트워크 론'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대출의 연착륙 지원**

6 서민생활 안정

○ **임대주택 활성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등으로 서민가계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회복

- 소득세 인하, 근로자의 표준소득 공제 확대 등 **세부담도 경감**

○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노인·아동·장애인 지원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강화

○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활급여 대상자 확대,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

○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자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업종전환 등을 유도

Ⅲ. 2005년 경제운용의 모습

□ 이상의 정부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과 4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 **소비자물가**는 3% **초반**으로 **금년보다 안정**

○ **실업률은** 3% **중반**으로 **금년 수준 유지**

○ **경상수지**는 금년에 비해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확대되어 **연간으로 200억불 수준 흑자 기록**

	04년 예상	05년 모습
· GDP 성장률	4.7～4.8%	5% 수준
· 소비자 물가	3.6%	3% 초반
· 실 업 률	3.5%	3% 중반
· 경상 수지	270～280억불	200억불 수준

□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 **양질의 폭넓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별첨 >

주요 정책과제

1.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부문 투자확대 ····· 15

2.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16

3.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와 주택 공급·수요 확충 ····· 18

4.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 19

5.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22

6. 농어업의 체질강화 ····· 23

7.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 24

8. 규제개혁 가속화 ····· 25

9. 선진적 노사관계의 구축 ····· 26

10. 능동적 대외개방과 해외진출 강화 ····· 27

11. 국가균형 발전 노력 지속 ····· 31

12. 친환경적·자원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 32

13. 교육기회의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 33

14. 사회안전망 강화 ····· 34

15.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 완화 ····· 36

1.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부문 투자확대

□ **상반기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집행**(재정집행률 59%, 전년 동기대비 12조원 증가)함으로써 **내수를 보완**

* 상반기 재정집행률(%) :	(02)48.7 →	(03)53.0 →	(04)55.0→	(05계획)59수준
(집행금액, 조원)	73.7	83.3	87.5	100수준

○ 특히, **1/4분기중**에 매년 연초 집행이 부진한 **R&D 등 공모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절차 단축 노력**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집중 시행**하여 중산·서민층의 체감경기를 개선

-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은 금년 집행실적보다 확대하여 **1/4분기 60%, 상반기 80%이상을 집행**

□ 국가·사회 전반의 네트워크화와 디지털화 추진하기 위한 **IT 투자 확대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제공**(05년 3,056억)

○ 국유재산 등 **국가정보의 DB구축**, ITS 등 **교통·물류 시스템 개선과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 **주요 공기업(12개) 투자는 최대한 확대**하여 추진

* (03실적) 18.4 → (04.11말 실적) 22.6 → (05계획) 24.6조원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향후 6년간 약 5조원)하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추진**

○ 유료도로관리권을 기초로 5~20년 만기 ABS를 발행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재투자, **21개 노선의 공기를 평균 2년 단축**

2.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1)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BTO, BOT 외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을 추가**

○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는 투자원리금을 **임대료 방식으로 지급**

- **민간사업자**에는 **사업운영 risk를 줄여**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재정부담을 미래 장기간에 분산**하여 **공공서비스를 조기 공급**

○ BTL 방식의 민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토 등 대상사업 지정절차를 간소화**

□ **BTL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학교 등 **9개 시설로 확대**

* 국·공립 학교, 관사 등 군인 주거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문화시설

□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가 곤란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BTL과 유사한 임차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시설을 사학재단이 **일정기간 임차**하고, 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사학재단에 이전**하는 방식 허용

□ **05년 상반기** 중 **세부사업 확정** 및 **사업자 지정절차를 완료**하고 **05년 하반기 중 사업착수 추진**

(2) SOC 조기 확충

□ 기존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 현재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

* 대상사업 확정(04.11) : 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 고속도로

○ 민간이 제안한 사업 중 **노선간의 경쟁**을 통하여 **우선추진 사업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추진

* 우선추진 사업은 당초 2~3개에서 **5~6개**로 확대

□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 **민자**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05.1)

○ **도로공사와 연기금**이 공동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건설**시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05.1)

○ 생산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05.1)

□ **최저가낙찰제**는 최근의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확대계획***을 **조정**하여 추진

* 현행 500억이상 PQ공사 → 05년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 **내년 하반기에** 건설경기 회복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대시기·대상규모 등을 검토**

3.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와 주택 공급·수요 확충

□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주택 수급을 안정**시켜 나가고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

○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의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 강구**

*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 인하, 세제지원, 미분양 주택 임대사업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국민임대주택 10만호의 건설**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 소요택지 1,000만평(수도권 500만평)중 미확보된 택지 **325만평을 1/4분기중 지구지정**하여 차질없이 확보

-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 등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 참여 유인**

□ **강북 재개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52만호의 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 **공공택지 1,300만평 공급** 및 **1,500만평 신규 지정**

□ **주택신보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 주택신보 보증공급 규모(안) : (04) 4.0조원 → (05) 7.5조원

○ 개발이익환수제 시행과 함께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의 선별적 해제

4.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1)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해 **기업CB를 설립**하고, **중소기업보유 기술평가를 활성화**

○ 공공기관 R&D예산 중 5%이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확대**(04년 6,043억원→05년 6,300억원)

□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정부는 법무·회계·컨설팅 등 **경영지원회사 Network**를 구축하고 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05.4)

○ 소규모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화서비스를 받는 **ASP방식 이용비용의 7% 세액공제**

□ **중점지원부문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 **창업·기술기업** 및 시설자금, 무역자금 등 **중점지원부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공급을 확대**

*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07년까지 **50%**로 확대

○ 다만, 중장기적으로 **고액·장기보증의 점진적 감축** 등을 통해 **전체적인 보증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

(2) 벤처기업 활성화

□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을 지원**하고 정직한 실패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시스템을 구축**

○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조성

○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제한은 **완화**하되,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벤처캐피탈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협회, 신·기보 평가를 거쳐 **신규보증 등을 지원**

□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여건 개선

○ **기보**를 창업·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하여 3년간(05~07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 대기업의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범위 확대**(현재는 30%미만 출자시만 인정)

□ 벤처기업의 **성숙·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등 **투자·회수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 상장요건을 개선해 **거래소**는 **대형·우량기업** 중심시장으로,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시장으로 차별화

○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12→±15%)**과 거래대상 유가증권**을 거래소수준으로 확대하여 **시장의 역동성 제고**

○ 코스닥상장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출유예기간·호가중개시스템·M&A절차 등 **여건을 개선**

(3) 부품·소재 산업 육성

□ 수출과 국내투자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추진

○ 부품소재T/F팀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3개 산업의 10대 핵심품목 발전전략 수립**

○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의 협력투자사업 지원**

-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약정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수급펀드**」를 **조성**

- 수요기업-부품소재기업-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R&D 주체간 공동기술개발 추진**

○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을 **부품·소재 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술·인력·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국내 산업기반이 미약하고 자체개발에 한계가 있는 부문은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노력 강화

○ 일본 부품소재기업 유치를 위해 설치된 **Japan Desk**를 통해 05년까지 **30건 이상의 투자**를 유치

* 일본 노무라 종합 연구소와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조선 부분 등을 집중 유치

○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목적의 **EU, 미주, 아시아 등 주요 권역별 로드쇼 추진**

5.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총리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05.1/4)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

○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분야별 대책의 협의·조정에 중점**

○ 특히, **보육, 의료, 법률, 교육** 등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추진**

* 「보육발전계획」수립, 「의료서비스산업·제도개선협의회」운영, 「법률서비스경쟁력강화T/F」,「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제정 등

□ **서비스업에 불리한 차별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非신용장방식 수출, 물적담보 부족 등 서비스수출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 개선방안**을 마련(05 상반기)

○ **서비스업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세 경감**(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예) 관광유원시설중 야외 동·식물원, 퍼블릭골프장 용지 등

□ 주 40시간제 확산에 따른 관광·레저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

○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

○ **골프장 특소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하여 세금감면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추진

6. 농어업의 체질강화

□ 쌀협상에 따른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쌀농가의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확충**

○ 현행 추곡수매제를 **시가수매·시가방출방식의 공공비축제로 개편**

- **고품질 쌀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RPC: Rice Processing Complex) 등 **민간유통기능도 대폭 활성화**

○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17만원/80kg)과 산지가격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보전

□ **농업경영체의 활성화 및 농업·농촌투자 유치노력 강화**

○ **13년까지 20만호의 정예 선도농가**(쌀 선도농가 7만호 포함)를 중심으로 경쟁산업화

○ 협동조합간 공동사업법인 설립 촉진 등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된 농산물유통주체** 육성

○ **사람·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으로 **농업 R&D와 부가가치 제고**

○ 농지유동화 정보제공, 수탁관리·매입·비축을 주기능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 도입**

○ 영농·영어 비용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시한을 2007년 6월말까지 2년간 연장**(연간 조세지원액 2조원)

□ **고품질 우수농수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수출농어업 육성**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정립하고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범위를 확대

○ 브랜드전시회 등 **판촉강화**와 한류마케팅을 통한 **수출증대**

7.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 **핵심인력 양성과 기초과학 진흥, 기술혁신 유인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혁신역량 강화

○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과 처우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과 공공기관의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를 도입**

○ **산업계 중심의 산학협력을 활성화**(04~08년간 총 2,000억원 지원)

○ **정부 R&D 사업**에 대해 참여하는 기업의 의무부담비율과 현금투자 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제도 개선**

○ 각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합**(7개→2개)·**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본격 추진**과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 차세대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차세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선도**

*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03년 62개 기술반영→08년까지 300개 기술반영

○ **출자총액제 예외인정**과 정부구매 등 **초기시장 창출**로 차세대 산업 등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 유도

○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정착, **대덕 연구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8. 규제개혁 가속화

□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

○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미 선정된 **60개 전략기획 과제**에 대해 2단계로 나누어 **06년 8월까지 정비**

* **1단계** : 물류·유통, 건축·건설, 기업투자환경, 국민편의, 서비스분야 등
* **2단계** : 금융·세제, 정보통신·방송, 노동·산업안전, 공정경쟁·환경 등

○ 04년 확정된 주요 **덩어리규제 정비방안**을 차질없이 시행

1)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
2) 기업의 행정조사 요건 및 절차를 투명화하고 기업 자율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칭)행정조사기본법 제정

□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05 상반기 입법완료, 06.1월 시행)

○ 새로운 용도지역·지구 신설 제한, 지역·지구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의무화**와 매뉴얼식 **규제안내서** 작성 등

□ 분기별로 **총리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심사·평가를 강화하여 규제품질 및 투명성 제고

○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규제 필요성, 대체수단, 규제비용·편익 비교)에 의해 철저히 심사

○ 05년부터 매년 **부처별 규제개혁 노력 및 실적, 국민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공개

9. 선진적 노사관계의 구축

□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 대화와 타협의 교섭분위기를 조성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바람직한 교섭방향을 제시하여 **근로손실일수를 최소화**

* 근로손실일수(천일) : (02)1,578 → (03)1,295 → (04)1,192

○ 주요 분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체제를 가동**하여 대응방향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실업자의 노조가입 문제, 대체근로 제한 완화, 정리해고제한 완화 등

○ **노사정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 **노사정위원회**가 내실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착하도록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 일부 노동단체의 불참, 공익위원 역할의 한계, 의사결정 지연 등

○ 노사정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추진**

10. 능동적 대외개방과 해외진출 강화

(1) 능동적 대외개방과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 FTA·DDA 협상을 통해 **능동적 자세로 대외개방**을 추진

○ **한·일 FTA는 05년내 타결을 목표로, ASEAN과는 05년초 협상을 개시**하여 2년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 05년초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협상을 개시하고, 05년중 **멕시코, 인도, 캐나다 등**과 공동연구를 완료한 후 협상개시 여부를 검토

□ 아울러, 대외개방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과 보완대책** 마련,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

○ 특히, **서비스 산업은** 상반기 중 DDA 협상에서 개방요청이 있었던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 이러한 개방을 바탕으로 세제·입지·고용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

○ 장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최초 투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효력을 사업개시일 이전 증자분까지도 인정**

○ 생산공정을 수반하지 않는 고도기술수반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과 관련된 **R&D투자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혜택 부여**

○ **SOC 분야중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방식 요건을 완화**

○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통합·운영**하고 입주가능 업종을 종전의 제조업이외에 **물류업까지 확대**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기업도시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감면)

□ 동북아 경제중심의 본격화

○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기업들과의 **후속 투자협약을 진행**하여 외자유치를 가시화

* 인천공항 북측 국제업무지구 개발(04.4, AMEC社), 송도 국제업무지구(Gale사 개발추진 중), 청라지구(세계적 Theme Park, 차이나시티 유치)

○ **인천공항 제2연륙교 착공**(05 상반기),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착공**과 우선적 국고지원을 통한 조기완공 추진

* 경제자유구역지원예산: (04) 12,767억원 → (05) 18,752(46.8%증가)

○ **경제자유구역내** 해외 유수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제도개선 작업 마무리**(05 상반기)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외국의사자격면허 기준 제정 등

○ **KIC 설립 등 자산운용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 국제경쟁력 있는 **물류전문기업 육성, 한중일 3국간 물류분야 협력사업**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 구축

(2) 해외진출 본격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 산유국을 중심으로 신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

○ 전세계를 **5개 거점지역으로 구분***하고 중점 진출대상을 선정한 후 **거점 지역별로 특화된 수주 확대전략** 마련

* 중동·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중국, 서남아시아, 러시아·CIS, 중남미

○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전략적 수주 지원

□ **해외플랜트·건설·IT·해운**분야 **해외진출 적극 추진**

○ **(플랜트) 제작금융보증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과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사업** 등 인력·기술인프라 구축

○ **(건설) 우수 해외건설업체 지정제도,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외국과의 건설협력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

○ **(IT) 핵심 품목에 대한 국제 표준활동과 해외 마케팅 강화, 민관 IT협력채널 등을 통해** 차세대 세계시장을 선점

○ **(해운) 외항상선의 톤세제 도입,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 국제해운 협력 강화**로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확대

□ 상품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 일류상품 추가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

○ 아울러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규모도 확대**

□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EDCF 활성화**

○ **한·미 양국간** 정부와 민간경협 채널을 활성화하여 **통상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투자확대를 도모**

○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한·러 공동위원회, ASEAN+3 회의 등 **주요국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채널을 최대한 활용**

○ 금년 대통령 순방외교를 토대로 **에너지·자원**(CIS, 중남미), IT(인도), **인프라**(베트남) 등 **지역별·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성과를 가시화

○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EDCF의 기금 재원을 확충**하고 **금리인하, 집행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 05년 APEC **정상회의·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IDB 가입**을 계기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 APEC 회의 개최를 **우리 경제의 적극적인 홍보기회**로 삼고, IDB 가입을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로 활용

□ **남북 경협사업들을 지속 추진**하여 활성화

○ **개성공단 본단지 조성,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간에 기 합의한 경제협력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 상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설치 등 **민간차원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

11. 국가균형 발전 노력 지속

□ 국가균형 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수행

○ 신국토구상, 신행정수도 후속조치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새롭게 마련**

○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집단이전**하고 이와 연계한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지방의 활력을 제고

- 이와 연계하여 **「新수도권 발전방안」 추진**

* 서울은 금융·국제비즈니스, 인천은 동북아물류, 경기는 첨단산업

○ **제1차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05.2)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본격 추진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04.12.9)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 부담금 감면, 이전기업 종사자의 주택특별공급,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낙후도에 따른 개발이익 차등환수 등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시범사업은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하여 **도시유형별*로 균형있게 2~4개 선정**(05 하반기 구역지정)

* 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 혁신거점

○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법인세 등 세제지원**

12. 친환경적·자원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 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유류 상대가격비를 조정**

○ **대기오염 총량제 시범사업,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본격화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05~14년)

○ **수송용 유류세 상대가격비를 05년 하반기부터 조정**하고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방안을 강구

* 상대가격비(휘발유:경유:LPG): (1차) 100:75:60 → (2차) 100:85:50

□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조치 도입 등 **종합대책을 수립**(05.2)

□ 고유가의 고착화에 대비한 **자원절약형 경제시스템 구축**

○ **에너지원단위 3개년**(05~07년) **개선계획**(04.12 수립) 추진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3년주기 에너지 진단 의무화,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장 확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대상 확대 등

○ 에너지 저소비형사회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을 위한 **에너지 특별회계 세입원 확대방안을 강구**

- **05년중 차입, 부과금 조정**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

□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석유 정부비축량 확충, 해외유전 개발 등 **석유수급의 안정성 제고**

* 정부비축량(백만 배럴) : (04) 72.3 → (05) 78.6(6.3백만 배럴 확충)
* 원유 자주개발율(해외유전개발 공급량/총수입량, %) : (04) 4.1 → (05) 5

13. 교육기회의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 현행 이차보전방식 학자금 대출(Loan)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제공
(05년 상반기중 관련법률 제·개정, 05년도 2학기부터 시행 추진)

○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공적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유동화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저리 자금조달**을 지원

○ **대출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액도 등록금 외에 **생활비까지 포함**하여 지원

* 대출기간 : 현행 최장 14년 → 최장 20년으로 확대
대출금액 : 현행 등록금한정(2,000만원한도) → 생활비 포함(3,600만원한도)

- **기초생활보장가구 대학생 등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 대상별·목적별로 이자율 및 상환기간의 차등화 검토

* 교육부내 부처합동 T/F를 운영(04.12~05.6)하여 논의

○ 기존의 무상(Grant) 학자금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과학기술(이공계) 연구개발 장학사업**으로 개편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고용기회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

○ **고용촉진훈련**에 차상위계층을 참여시키는 한편, **자활직업훈련**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확대, e-러닝 수강지원금 제도 도입, 파트타임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활성화**

14. 사회안전망 강화

(1)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탈빈곤 대책 내실화

○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평균 8.9%)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

○ 자활급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노인요양보험법 제정** 등 노인복지체계 조기 구축,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 인상,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등**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 **보육료 지원수준**을 높이고 지원대상 역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의 가구까지 점차 확대**

○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대상**과 **장애아 전담시설 확대**

□ **필수 보건의료 국가시스템 확충 및 고령사회 대비**

○ 응급의료센터, 응급전문의 등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립의료원의 확대개편**과 **지역암센터 설립**을 추진

○ 소규모 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노인질환 및 요양보호 기반 구축**

(2) 4대 보험의 내실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전문성·수익성을 제고

○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부과소득 등급체계 현실화**

○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제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 투자다변화 등을 통해 **연기금의 전문성과 수익성 제고**

□ 고용·산재 보험의 적용확대 및 운영내실화

○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건설업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급여 상한(3.5만원)을 상향** 조정 검토

○ 연구용역(04.10~05.5)을 바탕으로 **적정 적립금 규모 설정, 보험료율 조정 등 고용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건강 증진 강화

○ 적정수준의 보험료·의료수가 조정 등을 통해 **당기재정 수지균형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장성 확대** 추진

○ 저소득 **11세이하 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신규 적용과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사업 확대**

(3)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 검토

□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전**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 검토

○ **상반기중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제도 개선, 과세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실시 등 **추진계획** 마련

15. 서민 · 중산층 가계의 부담 완화

□ 소득세율 인하(1%p) 등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

○ **근로자**에 대해 **표준공제**(60→100만원)와 **직업훈련비용 공제 확대,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시한 연장** 등 부담 경감

□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부담을 완화**

○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주택모기지론 확대, 서민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검토** 등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 Reverse Mortgage를 **활성화**하여 노령자 등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

□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 주택담보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한도를 상향조정**(2억원→3억원)

○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과 금융권에서 **공동 채권추심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중소기업 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과 **만기 구조 장기화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애로를 해소**

* 신·기보의 보증서 만기를 3·5년으로 장기화하여 05년 중 전은행으로 확대

○ **네트워크론 운용**을 **상반기중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